

“광주·전남 대부흥 열 것” 대통합 공동합의

광주시·전남도·광주시교육청·전남도교육청이 광주·전남 행정 대통합에 함께하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4자 협의체 간담회'를 갖고, 통합 특별시와 특별시교육청 출범을 목표로 '광주·전남 대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 합의문에서 4개 행정기관은 광주·전남 통합 광역지방정부와 광역지방교육청 출범이 역사적 사명임을 공감하며,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최적의 통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4자 협의체'는 '(가칭)광주전남특별시'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2026년 2월 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상호 긴밀히 협력하고, 시·도의회와 함께 공감대 확산을 위해 설명회, 토론회, 간담회 등 공청회를 시·군·구별로 개최한다.

또 행정·교육행정 통합 이후에도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지켜 나가도록 공동 협력하고, 교육이 지역발전의 초석임을 인식하며 광주·전남 행정·교육행정 통합 과정에서 교육자치를 보장하기로 명시했다.

합의문에는 통합 특별시와 통합 특별시교육청 설치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종전의 광주시와 전남도 관할구역에서 근무하는 내용도 담겼다.

4자 협의체는 행정·교육행정 통합 이후 행정체계, 재정구조, 조직 개편, 권역별 균형발전 전략, 교육자치 등 (가칭)광주전남

14일 국회서 '4자 협의체' 간담회... 특별법 2월 국회 통과 시도민 공감대 확산·교육자치 보장·미래전략 등 공동 마련



특별시의 미래 전략을 공동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전남 양 교육청이 한목소리로 뜻을 모은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 합의 배경에는 교육자치를 확고히 보장하라는 교육계와 시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다"며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보장해 행정·교육행정 통합을 반드시 성공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시·도민들께서

대통합의 염원을 담아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계의 참여는 통합에 큰 의미를 더해준다"며 "행정통합 과정에서 27개 시·군·구는 물론, 어떤 직업군도 소외되거나 손해 보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가치를 굳건히 수호하고, 인사 등에서 교육 구성원의 불이익이 없도록 현장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며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호남의

미래를 이끌 인재 양성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광주·전남은 원래 한 뿌리로, 이번 통합은 지역 경쟁력과 교육의 질을 함께 높이는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다"며 "이를 위해 교육자치의 확고한 보장과 교직원 인사의 안정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특히 지역소멸과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농어촌·소규모학교 특례를 포함한 실질적인 지원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광훈 기자

광주 서구, 골목상권에 인공지능 입힌다

14일 AI전문기업(주)면슬리키친 서울 본사에서 업무협약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전국 처음으로 지자체 주도형 '골목상권 인공지능(AI) 실증사업'을 추진하며 골목경제 활성화에 AI경쟁력을 더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

서구는 14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외식 디지털 솔루션 기업(주)면슬리키친(대표 김혁균) 본사에서 '인공지능 활용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면슬리키친은 테이블오더 시스템과 AI 기반 고객 데이터 분석, 매출·수요 예측 솔루션을 보유한 기술기업으로 7년여 간 미국 대형 레스토랑 상용화 실적과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공급 경험을 갖춘 기업이다.

실증사업은 협약 체결 이후 약 6개월간 진행된다. 서구는 참여업체 모집, 테스트베드 제공 등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주)면슬리키친은 실증 기간 동안 참여업체에 테이블오더 기기와 AI 기반 홍보·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하며 교육·컨설팅, 시스템 유지관리, 기술지원을 함께 수행한다.

참여업체에 제공되는 AI 매출업 솔루션은 단순 주문·결제 기능을 넘어 인공지능이 고객 방문 패턴과 소비 데이터를 정밀 분석해 재방문 가능성이 높은 고객에게 최적 시점에 맞춤형 쿠폰과 프로모션을 자동 제공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번 사업은 초기 도입 비용과 운

영 부담으로 디지털 전환을 망설였던 소상공인들에게 무상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기술 활용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장벽을 낮추고 실질적인 매출 개선 가능성을 현장에서 검증하는 데 의미가 있다.

서구와 (주)면슬리키친은 실증사업 종료 이후 참여업체가 자율적으로 서비스 지속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실증 성과를 분석해 향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정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행정이 적극적으로 기업과 기술을 발굴해 소상공인이 부담 없이 디지털 전환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첫 발을 내딛었다"며 "다양한 민관협력을 통해 골목경제의 체질을 바꾸며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혁균 (주)면슬리키친 대표는 "서구의 선도적 골목경제 정책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을 비롯해 전국적인 관심을 끌면서 기업 입장에서든 눈여겨 보게 됐다"며 "실증사업 기회를 얻어준 광주 서구에 깊이 감사하며 우리 기업도 골목경제 활성화에 힘을 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실증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 모집 일정과 세부 내용은 1월 중 서구청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박석우 기자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구정 소식지인 '북소리'를 통해 지역의 생생한 소식을 전달하는 명예기자단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북소리 명예기자단'은 구정 홍보에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09년 발족한 이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이번 모집에서는 제9기 명예기자단 40여 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에 관심이 많고 기사 작성 및 인터넷 활용 능력이 갖춘 북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북구, 지역 소식 전하는 주민 기자 모집

다음 달 12일까지 제9기 북소리 명예기자단 40여 명 모집

수 있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12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지원서와 자유 주제 기사 1개를 작성해 이메일(hanrim9@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자들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맞춤형 멘토, 문장 표현력, 구경 이해도 및 관심도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한 뒤 2월 말 최종

합격자를 확정될 계획이다. 선발된 명예기자는 오는 3월부터 2년간 활동하며 주민들의 시선에서 지역 소식과 미담 사례 등을 취재해 '북소리'에 연 1회 이상 기사를 게재한다.

북구는 명예기자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편집회의, 워크숍, 교육 등을 지원하고 원고가 채택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지

급할 계획이다.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지 사항을 확인하거나 북구청 홍보실(☎062-410-6663)로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북소리 명예기자단은 주민이 직접 지역의 변화와 일상을 전하는 매진적인 만큼 이번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북소리가 주민과 행정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현근 기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변호관을 회수하는 행정 조치에 나선다.

남구는 14일 "자동차세 체납 차량 변호관 영치를 앞두고 소유주에게 사전 안내 및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5일 예고문을 발송한다"면서 "행정처분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납세 문

광주 남구,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변호판 펜다'

화 정착을 위해 성실하게 납부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현재 관내 자동차 변호판 영치 대상은 2,871대이다. 전체 체납액만 24억 2,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변호판 영치 예고문에는 체납 내역과

납부 계좌, 변호판 영치 예정 사실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안내문을 받은 차량 소유주가 오는 2월 2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하면 변호판 영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남구는 생계유지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 중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본

납 또는 영치 일시 해제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 차량 변호판 영치는 차량 운행 제한을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조세 형평성과 행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면서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재일 기자

전남도, 지방규제혁신 4년 연속 우수... 전국 유일

행안부 성과평가 결과, 신안군·함평군도 최우수·우수 성과

전라남도가 행정안전부의 '2025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광역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4년 연속 규제혁신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평가에서 신안군과 함평군은 기초부문에서 각각 최우수·우수상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기초 226)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 성과를 평가해 광역과 기초로 구분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특별교부세를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광역지자체 3곳과 기초지자체 18곳(시 6·군 7·구 5)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특별교부세 32억 원을 배분했다.

이번 평가 결과 전남도는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으며, 신안군은 특별교부

세 3억 원과 대통령 표창을, 함평군은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전남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2022년부터 4년 연속 규제혁신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누적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교부받았다.

전남도는 전문가 참여를 통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확대, 도 중점규제개선 과제 발굴·추진, 행안부 등 중앙부처와의 규제개혁 토론회와 현장 간담회 8회 개최 등 규제 발굴과 개선을 지속했다.

윤진호 전남도 행정부지사 직무대리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개선에 힘쓰는 도와 시군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져 의미가 크다"며 "올해도 지역 주요 현안과 직결된 규제를 중심으로 발굴과 개선을 강화해 도민과 기업이 체감할 규제혁신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염선호 기자



교실에서
찾은 희망,
희망을 키우는
광주교육